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 편성 도의회 제출

도, 민생회복 신속지원·코로나19 극복

5643억원 규모... 상생국민지원금 등 반영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정부발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민생안정 추가지원에 중점을 둔 5,64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2021년 전북도 예산 총 규모는 9,399,07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5,643억원 중 일반회계 5,640억원(7.4% ↑), 특별회계 3억원(0.01% ↓)으로 편성했다.

먼저, 도민 162만명에게 1인 25만원씩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이에 필요한 행정경비 등을 반영했으며,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한시적 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1인 25만원)과 별도로 1인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선정 1일 2식을 지원하기 위해 17억원을 반영했고,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6,822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회추경시 농·어가에 이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 257명에게 각각 100만원 임산물 채배 소규모 영세 임업인에게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소상공인에게 노랑공예 가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존 월 1만원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3,650명에게 월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50억원을 반영,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액 5,400억원에 대해 4~6% 할인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희망근로 지원으로 취약계층 중심 고용촉진 완화를 위해 생활형 분야 등에 78억원을 반영해 2,494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추진해오던 노인일자리(중 2,297명), 자활근로(중 147명) 등의 소외계층 일자리와, 직무교육 등을 통한 지역청년 일자리(중 400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방역·집중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 복지·안전 지원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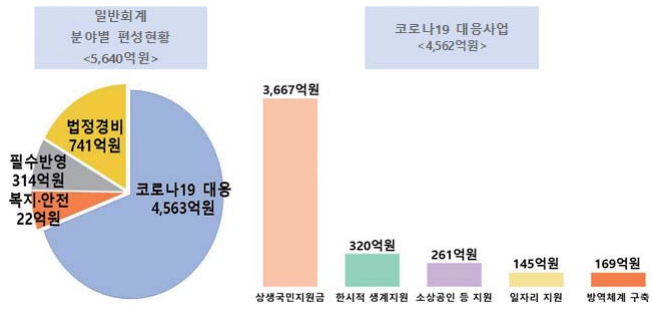
우선, 코로나19 격리대상자 확대에 따라 상반기 1,000~2,000 가구 외 하반기 1,000가구 이상의 지원에 대비하기 위해 77억원을 반영했다.

격리원격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해 8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원활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접종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 55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아울러,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운영을 위해 9억원을 반영해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 추경에 산업지도 개



편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필수반영사업도 편성했다.

'기술사업화 및 협업 플랫폼 구축'에 대비 10억원을 반영했고, 나노소재 적용 첨단부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해 국비 10억원과 별도로 도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95억원 규모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단에 설치되는 '사후후 연료전기 센터' 구축도 첫발을 닦았다.

또한, 하수처리 과정 ICT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 공모사업에 남원시와 무주군이 선정됨에 따라 17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농·어업분야에는 구제역·AI 등 신종병에 대한 보상과, 농수산분야 정부공모사업 선정사업 등 139억원을 반영했다.

축산분야는 AI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지원(106호)을 위해 12억원, 가축살처분 4동가에 대한 보상금 5억원, 예방약품과 검진재료비에 13억원을 추가

로 반영했다.

어업분야에는 2020년도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인 새우 생산어가에 18억원, 배합사료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어가에 3억원, 근해어선 적합수준 감축을 위한 보상금 18억원(3척)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국산밀 생산단지 지원사업 3억원, 장류기능성규명 구축사업 4억원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도 반영했다.

SOC분야에서는 도로, 교량 등의 기본인프라 확충과 도시·농촌 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 등 132억원을 반영했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오는 9월 10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므로, 민생안정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며, 생활방역과 백신접종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과 함께 미래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간담회를 전주 데이호텔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산업 규제·애로 발굴·육성

도-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 신산업 규제 해소 협약·간담회

도내 주력산업과 신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전북도와 산업부(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가 머리를 맞댔다.

도는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과 함께 미래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간담회를 전주 데이호텔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우방기 정무부지사, 천세창 업무즈만, 양근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비롯해, 신산업 각 분야의 신산업 관련 연구자와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은 이날 전북도의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 이슈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관련 논의를 펼쳤다.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은 산업융합 분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설립된 것으로 전방위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900억원을 적립했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38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융합 관련 규제·애로 이슈 총 12건이 제시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은 "전북도와 함께 규제 검토 및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추진, 전북기업이 4차 산업 융복합 혁명시대의 경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북도와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은 전북도 지역 기업의 융·복합 미래 신산업 규제·애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도내 소재 기업의 융·복합 미래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협력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원, 미래 신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도모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전북도와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은 신산업 분야 규제이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우방기 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와 산업융합촉진 업무즈만간 긴밀한 협업 및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교육청, 학생건강·안전 등 총 3558억 규모

방역 체계 강화 최우선 고려

코로나19로 공포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의 집행 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내 집행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 신속한 예산 집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또 이·불응율 최소화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와 연도간 균형 있는 재정 지원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비

전수입 3,344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2억원 등 기정예산 3,358,879억 대비 총 3,558억9900(9.9%) 늘어난 3,943,779억원 규모다.

추경예산안은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2학기 등교 수업에 차질없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 우선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 지원액 36억원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비 지원 34억원 ▲열화상 카메라 지원 14억원 ▲내가 고른 책 읽기를 통해 정서 회복을 통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 도서(책꾸러미) 지원 107억원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을 위한 자동세척소독기 17억원 ▲책 소독기 지원 11억원 등 219억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학생건강 및 안전을 위해 ▲폐작하고 안전한 실험수업을 위한

과학실 환경 조성 35억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관리 20억원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가구 및 시설 확충 21억원 등 81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학생 공간 상담을 위한 학생 상담·치유 지원 16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 18억원 ▲진로교육 지원 18억원 ▲수련교육 융복합사업 16억원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15억원 ▲특성화고 지원 15억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12억원 ▲무선환경 구축을 통한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27억원 ▲특수교육·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1억원 등 학생들의 심리안정을 통한 정서 회복과 학생 복지를 위해 250억원 편성했다. /정은성 기자

또 학교 현장 지원 및 노후된 교육시설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458억원 ▲친환경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학교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72억원 ▲초등 1학년 교실 공간 혁신 63억원 ▲학교자치 복합공간 설치 48억원 ▲오감놀이 공간 조성 등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34억원 ▲학교도서관, 영어체험교실, 가사실습실 현대화 등 101억원 ▲원격수업 환경 구축 15억원 등 906억원을 반영, 미래교육 변화를 대비한 현장 맞춤형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향후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900억원을 적립했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38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 8월 국회 처리해야”

이명연 도의원, 복지위 통과 환영...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령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환영과 함께, 8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6년 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20대 국회와 마무리된 것에 비춰볼때 관련 급변 보건복지위 통과에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는 폐쇄적이고 정보비밀성 차에 놓여있는 수술실이라는 공간적

한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 부정 의료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고 규명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시작됐다. 실제,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역시 참여자의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이 의원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가 남아있으며 '더럽게 공식 논의' 석상에 오르게 된 수술실 CCTV 설치 법령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해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수많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추석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적 상향율”

민중 전국농어민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민중당 농어민위는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사진)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보내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우행으로 인한 관료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앞서 검증했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

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10만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해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20만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잔파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노을대교 건설 추진 지속 뒷받침”

정운천 의원, 예타 통과 환영

정운천 국민의원 국민통합위원장은(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도민의 17년 숙원이었던 '노을(부창)대교 건설사업(총사업비 3,390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인도철 2차판 주제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노을대교 등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 결과와 올해 제5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면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담겨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천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5년째 노을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으며, 국토교

통부 도로국, 익산시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방과 지속적으 소통하며, 노을대교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들이 17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결과는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 팔팔 땀겨 이룬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향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9'로